

[일본] 코로나19 관련 동향

2020. 4. 23

1. 확산 동향

- 일본은 2020년 1월 15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4월 23일(오전 10:30 기준) 까지 총 12,735명의 감염자와 312명의 사망자가 발생
 - 국내 감염자는 12,023명(사망 299명)이며, 그 중 우한발 전세기에서 발생한 감염자는 14명,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승객·승무원 중 감염자는 712명(사망 13명)으로 집계
 - 지역별로는 도쿄도(3,439명), 오사카부(1,380명), 가나가와현(836명), 치바현(746명), 사이타마현(726명), 후쿠오카현(563명), 효고현(560명), 홋카이도(495명), 아이치현(449명), 교토부(275명), 이시카와현(214명) 순으로 감염이 확산
 - 4월 16일 발표한 13개 ‘특정경계도시’에서 확진자의 70%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경로 불명의 확진자 비중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¹⁾
 - 한편, 4월 29일~5월 6일 골든위크를 앞두고 연휴 기간 중 도시이동에 의해 확진자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그림 1>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4월 23일 오전 10:30)



주: 지역별 지도는 4월 23일, 1일 확진자 도표는 4월 22일 기준
 자료: <https://www3.nhk.or.jp/news/special/coronavirus/data/>(검색일: 2020. 4. 23).

-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의 조사(4월 14~17일)에 따르면 대기업 대부분이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단련 회원 기업 중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97.8%에 달하나, 출근자가 70% 이상 감소한 기업은 52.4%에 불과²⁾

1) 首相官邸(2020. 4. 22),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第30回)」.

2. 정부의 대응

- 일본정부는 4월 16일 긴급사태선언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결정(5월 6일까지)
 - 기존 긴급사태선언 지역인 7개 도도부현을 포함한 총 13개 지역을 ‘특정경제도시’로 지칭하고 중점적으로 감염 확대 방지책을 추진할 것을 밝힘.
 - 13개 지역은 도쿄, 사이타마, 치바, 가나가와,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및 홋카이도, 이바라키, 이시카와, 기후, 아이치, 교토를 포함.
 - ‘특정경제도시’ 중 하나인 교토는 3월 17일 유흥시설, 운동시설, 놀이터 등에 대해 휴업·폐쇄를 요청하기로 결정(13일부터 5월 6일까지)
- 일본정부는 4월 20일, 4월 7일에 의결한 제3차 긴급경제대책을 수정한 후 다시 각의결정
 - 코로나19로 세대주의 월소득이 기준금액³⁾ 이하인 대상 가구에 30만 엔의 현금을 지급하는 기존 방침 대신 국민 1인당 10만 엔을 일률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기존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수정함.
 - 이에 따라 현금급부 예산이 기존 4조 엔에서 12.9조 엔으로 대폭 증액 되었으며, 중앙·지방의 세출액은 19조 엔→28조 엔으로 확대됨.
 - 2019년 12월 5일 발표한 종합경제대책, 긴급경제대책 1~3탄 및 4월 20일 발표한 긴급경제대책을 포함한 총 경제대책 규모는 약 117.1조 엔(사업규모)으로 GDP의 21%에 해당하며, 해당 재정지출은 48.4조 엔 정도

<표 1> 일본의 긴급경제대책의 내역(2020. 4. 20. 현재)

(단위: 조 엔)

| | 재정지출 | | | 사업규모 | |
|-------------------------|------|--------|-------|------|-------|
|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재정투자자 | | |
| 종합경제대책(2019년) | 13.2 | 7.6 | 1.8 | 3.8 | 26.0 |
| 종합경제대책 중 현재까지 집행된 부분 | 9.8 | 6.0* | 1.4* | 2.4* | 19.8 |
| 긴급경제대책 제1·2탄 | 0.5 | 0.5 | - | - | 2.1 |
| 이번 대책의 신규추가분 | 38.1 | 27.5** | 0.5** | 10.1 | 95.2 |
| | 48.4 | 33.9* | 1.9* | 12.5 | 117.1 |

주: *: 제일생명경제연구소에서 추정한 값; **: 이번에 새로 추가된 정부부처의 세출
자료: 第一生命經濟研究所(2020. 4. 22), 「修正版・緊急經濟対策の概要」.

2) NHK News(2020. 4. 23), 「テレワーク導入進むも出勤者7割削減は半数ほどにとどまる」.

3) 개인주민세 비과세 수준. 지자체별·직업별·가족 구성별로 개인주민세 비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 기준에 차등이 발생하고 기준이 복잡하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4월 9일 총무성은 지급기준을 단순화하여 발표한바 있음.

- 총무성은 4월 20일 1인당 10만 엔 일률 지급의 대상 및 절차를 발표⁴⁾
 - 4월 27일 시점을 기준으로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람(내국인 및 3개월 이상의 체류자격 등을 보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편·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급
- 수정 추경예산안은 4월 2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30일 중의원 본회의 및 참의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

3. 경제적 영향

□ 3월 월간 경제지표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드러나고 있음.

- **(무역)**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3월 수출금액은 전년대비 -11.7%로 16개월 연속 감소(전월대비 -1.0% 하락)했으며, 수입은 -5.0%로 11개월 연속 감소(전월대비 -13.9% 감소)⁵⁾
 - 3월 중순 이후 미국 및 유럽 각국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사업장의 영업활동이 정지했으며, 이에 따라 3월 대미 수출(전년대비 -16.5%) 및 대EU 수출(전년대비 -11.1%)이 급감
 - 품목별로는 수요 침체에 따른 공장 중단으로 운송기기 등 가공기계 관련 하락이 눈에 띄며, 특히 대미 수출의 자동차, 대싱가포르 수출의 선박, 대중 수출의 자동차부품 등이 감소⁶⁾
 - 미국·유럽의 자본재 및 내구 소비재 수출은 4월에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⁷⁾
- **(관광)** 4월 14일 법무성 출입국관리통계에 따르면 3월 외국인 신규 입국자는 전년동월대비 90% 이상 감소(250만 4천→15만 2천)⁸⁾
 - 국가별로는 중국이 54만 6천→3,7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9%감소했으며, 한국은 56만 6천→1만 명으로 98% 감소
 - 미국도 90% 가까이 감소했으며, 유럽은 80% 감소⁹⁾
- **(도산)** 도쿄상공리서치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기업 도산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¹⁰⁾

4) 総務省(2020. 4. 20), 「特別定額給付金」(검색일: 2020. 4. 20).

5) 財務省(2020. 4. 20), 「報道発表令和2年3月分貿易統計(速報)の概要」.

6) Bloomberg(2020. 4. 20), 「3月輸出は11.7%減、16年7月以来の落ち込み-新型コロナ拡大で」.

7) 大和総研(2020. 4. 21), 「2020年3月貿易統計~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で輸出は大幅減: 日本」.

8) 法務省(2020. 4. 14), 「出入国管理統計統, 3月(速報値)」.

9) 日本経済新聞(2020. 4. 14), 「外国人の入国者9割超減、3月 中韓など大幅減」.

10) 東京商工リサーチ(2020. 4. 21), 「「新型コロナウイルス」関連倒産状況【4月21日17:00 現在】」.

- 코로나19 관련 도산은 2월에 2건, 3월에 23건이 발생했으며, 4월 21일 시점으로 총 53건이 발생(준비 중인 28건을 포함하면 총 78건)하는 등 급증하고 있음.

□ 긴급사태선언의 전국 확대와 특정경계도시 지정으로 경제에 악영향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

- 긴급사태선언 확대 등으로 개인소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외출 자제의 영향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소비 항목은 외식, 시설 유지·보수, 가구·가전용품, 의복 및 신발, 교통, 오락 등으로, 이는 전체 소비지출의 약 55%을 차지함.¹¹⁾
- 긴급사태선언 전국 확대로 인한 상기항목의 소비 감소로 최대 8.4조 엔의 가계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연간 GDP 대비 -1.3%의 손실 발생)¹²⁾

□ 한편, 추경예산 추가와 세수 감소에 의해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정부의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사태로 2020년 재정적자는 2009년 리먼 쇼크 당시를 넘어서 1998년도 아시아 외환위기 수준에 필적할 것으로 전망¹³⁾
- 이에 따라 아베정부가 표명한 2025년도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를 달성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11) 第一生命經濟研究所(2020. 4. 20), 「テーマ：緊急事態宣言と緊急経済対策の影響」.

12) 第一生命經濟研究所(2020. 4. 20), 「緊急事態宣言、経済リスクの検証～時間、業種、地域の3軸で影響拡大リスクを試算～」.

13) 第一生命經濟研究所(2020. 4. 22), 「修正版・緊急経済対策の概要」.

<표 2>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대책

| 일시 | 내용 |
|--------|---|
| 1월 24일 | - 외무성은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을 두 번째로 강한 '레벨 3(여행 중지 권고)'으로 격상 |
| 1월 30일 | - 내각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범정부 대책본부 설치(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 |
| 1월 31일 | - 외무성은 중국 전역의 감염 위험 정보를 '레벨 2(불필요한 여행 자제 권고)'로 격상하고, 후베이성에 2주 이내에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 및 후베이성 발행 중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 거부를 발표 |
| 2월 1일 | - 코로나19를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하여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게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조치를 시행 * 조치 시행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환자에게 입원을 권고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 입원도 가능 * 2003년 사스, 2013년 H7N9형 조류독감, 2014년 메르스 등이 '지정감염증'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번이 5번째 지정 |
| 2월 13일 | - 정부 긴급대책(제1탄) 발표(153억 엔 규모) * 긴급대책은 ① 귀국자에 대한 지원(30억 엔) ② 국내 감염 대책 강화(65억 엔) ③ 미즈기와 대책 강화(34억 엔) ④ 피해 산업에 대한 긴급 대응(6억 엔) ⑤ 국제 협력 강화 등(18억 엔)으로 구성 - 중국 저장성 온주시의 감염 위험 정보를 후베이성과 동일한 '레벨 3'으로 격상하고 저장성에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 등에 대해 입국 금지 시행 |
| 2월 25일 | - 「코로나19 대책의 기본 방침」을 발표 |
| 2월 26일 | - 2주 동안 대규모 이벤트의 중단 혹은 연기를 권고 |
| 2월 27일 | - 전국 모든 초중고를 대상으로 3월 2일~봄까지 임시 휴교 요청 |
| 3월 4일 | - <신형인플루엔자대책특별조치법>의 개정안의 발표: 특별조치법의 대상으로 코로나19를 추가 |
| 3월 5일 | - 한국, 중국인의 일본 입국 시 2주간 강제격리조치 실시 결정(3월 9일자 발효) |
| 3월 9일 | -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국 금지를 결정 |
| 3월 10일 | - 정부 긴급대책(제2탄) 발표(약 2조엔 규모) * ① 감염확대방지 및 의료제공체제의 정비(486억 엔), ② 학교의 임시휴업 및 이에 따른 대응(2,463억 엔), ③ 사업활동의 축소 및 고용 대응 (1,192억 엔), ④ 사태 변화에 대응한 긴급조치(168억 엔), ⑤ 금융조치(1.6조 엔) - '긴급사태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결정(13일에 가결) (총리가 지자체에 외출자제, 휴교 등의 요청/지시를 할 수 있는 법안) - 이벤트, 모임 등 개최 자제 요청(2월 26일)을 10일 연장 |
| 3월 16일 | - 일본은행이 긴급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하고 금융 완화 조치 를 발표 * ETF·REIT 매입 확대, 금융기관에 최장 1년간 금리 0%로 대출하는 조치 신설, CP 및 회사채 매입 규모 확대 등 - 일본은행,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ECB), 캐나다중앙은행, 영란은행, 스위스 중앙은행의 6개 중앙은행은 달러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달러 스와프 라인 금리를 25bp 내리고 당초 1주일 단위였던 공급 기간 외 3개월 만기 오퍼레이션을 제공하기로 합의(미국시간 15일에 발표) - 외무성은 스위스의 티치노주, 이탈리아 북부의 3개 주 및 스페인 일부지역 및 아이슬란드를 '레벨 3' 지역으로 격상하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24개국을 '레벨 2'로, 영국 및 아일랜드를 '레벨 1(주의 환기)'로 지정 |
| 3월 18일 | -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추가적인 긴급 조치(「생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발표 * ① 개인긴급소액자금(소득지원, 상한 20만 엔) ②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 유예 ③ 국세·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④ 지방세 징수 유예 등 포함 - 외무성은 전 세계를 감염 위험 정보 '레벨 1'로 지정 |

| 일시 | 내용 |
|--------|---|
| 3월 19일 | - 정부·여당 및 일본은행은 4월에 발표할 예정인 긴급대책을 위한 논의를 시작 |
| 3월 22일 | - 후생노동성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생활자금으로 최대 20만엔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출특례조치를 결정 - 외무성은 미국 전역을 감염 위험 정보 '레벨 2'로 격상, 불필요한 여행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 |
| 3월 23일 | - 외무성은 이란 전역 및 유럽 18개 국가를 '여행금지권고' 수준인 감염 위험 정보 '레벨 3'으로 격상 - 내각부 산하에 약 50인 규모의 '코로나19대책추진실'을 설치 * 후생노동성, 총무성 등에서도 합류하여 기존보다 약 2배의 규모로 코로나19에 대응할 방침.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정부대책본부를 설치할 경우, 이 추진실은 본부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할 예정 |
| 3월 24일 | - 도쿄올림픽 1년 연기 결정 - 도쿄도지사가 도시 봉쇄 가능성을 언급 - 문부과학성이 '학교재개 가이드라인'을 책정 * ① 출석정지 및 차별방지, ② 원활한 학습 진행, ③ 학교재개 체크리스트, ④ 임시휴교 가이드라인 등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 |
| 3월 25일 | - 미국발 일본 입국자도 3월 26일 0시부터 2주간 격리조치 실시 - 외무성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토록 권고 (전 세계를 여행 자제 대상으로 한 것은 최초임.) |
| 3월 26일 | - 1월 30일 설치한 코로나19 대책본부를 <코로나19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내각 산하 조직으로 변경 * 이에 따라 전국 도도부현에 현지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계획 |
| 3월 28일 | -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전반적인 방침 등을 담은 「코로나19 대책의 기본적 대처방침(基本的対処方針)」을 발표 |
| 4월 1일 | - 외무성은 한국, 미국, 중국 등 49개 지역을 입국거부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입국거부 대상 지역: 총 73개) |
| 4월 7일 | - 도쿄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이에 대응하여 「기본적 대처방침」을 개정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경제대책(총액 108조 엔 규모)'를 발표 * ① 감염확대방지책과 의료제공체제의 정비 및 치료약의 개발(2.5조엔), ② 고용의 유지와 사업의 지속(80조엔), ③ 코로나 종식 후 경제활동의 회복(8.5조엔), ④ 강인한 경제구조의 구축(15.7조엔), ⑤ 향후 예비비(1.5조엔) 등 |
| 4월 9일 | - 총무성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당 30만 엔을 지급하는 현금급부책인 「생활지원특별수당」의 지급기준을 전국 일률적으로 단순화하여 발표 |
| 4월 16일 | - 정부는 기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긴급사태선언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5월 6일까지) - 기존 7개 지역 및 홋카이도, 아바라키현, 기후현, 아이치현, 교토부 등 13개 도도부현을 '특정경계도시'로 지칭, 중점적으로 확산 방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발표 |
| 4월 20일 | - 1인당 10만 엔의 현금지급을 각의결정 * 4월 7일에 의결한 긴급경제대책 중 가계 현금급부안을 수정한 후 다시 각의결정. 이에 대응하여 추가경정예산안도 확대 수정함. |

자료: 각종 언론, 정부발표자료 등을 토대로 정리